

대법원 2020므15896 혼인의 무효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4. 5. 2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음](#)(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
- 이와 달리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1. 사안의 개요

- 2001. 12.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2004. 10.경 이혼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음
-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소 각하

▣ 원심: 원고 항소 기각

● 주위적 청구

-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예비적 청구

-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역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함

3. 상고심의 주요 쟁점 : 전원합의 쟁점

▣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82므67 판결의 변경 여부

4. 대법원의 판단 ➡ 전원일치 의견

가. 법리의 선언

▣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됨.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

-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름. 즉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함
 -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09조 제2항에 규정된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이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함
-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님
-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방법과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됨

- 위와 같은 절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을 때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나. 판례의 변경

-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함**

다. 이 사건의 결론 ➡ 파기자판

- 원고가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가 혼인과 관련된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및 제1심법원으로 환송

5. 판결의 의의

- 종래 대법원은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혼인관계는 위 이혼신고로써 해소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 그런데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
- 즉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한 경우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판결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음